

제360회 국회  
(임시회)

##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국회사무처

2018년5월15일(화) 오후 2시

##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 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 1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

(14시02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6일 정부는 3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은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주요 국정현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이유와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겨울 평창에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감동적인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주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의 남북한 단일팀 출전은 한반도의 해빙을 시동하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이

어지게 했습니다. 평창의 겨울이 한반도의 봄을 이끈 것입니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온 겨레와 세계에 천명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면서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광복절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습니다.

이제 6월 12일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한미 정상회담이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고위회담을 통해 민족공멸의 불씨를 없애고 평화와 공영의 터전을 다지도록 혼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주시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당파를 넘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처럼 거대한 변화는 남북관계와 국제기류에 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국내의 여러 부문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도도하게 형성됐습니다. 정부와 민간은 사회 곳곳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하나씩 바로잡고 있습니다. 불공정과 왜곡을 시정하며 공정과 정의를 세워 가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새로운 철학에 따른 정책들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대 성장을 3년 만에 회복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소비와 투자가 함께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출도 4월까지의 누계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2년 연속 3%대 성장을 이루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를 12년 만에 넘어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생과 복지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5월 14일 현재 192만 명의 노동자와 56만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동수당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지급액수를 올리고 지급대상자를 늘렸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고 아이돌봄과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도 많습니다. 소득 양극화와 출산을 저하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지표가 좋아져도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영업자의 매출도, 노동자들의 삶도, 주부들의 살림살이도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문제를 모두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이번 추경의 요인에 집중해서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의 좌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취업자 증가는 11만 2000명으로 두 달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고 실업자 수는 125만 7000명으로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그중에서도 청년 취업이 몹시 어렵습니다. 지금 청년실업률은 11.6%, 체감실업률은 24%로 사실상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입니다.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가 20여 차례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시행했으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청년 일자리의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말해 줍니다.

청년 취업의 곤란에는 몇 가지 구조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인 고용 없는 성장을 국내 대기업들이 오히려 증폭시키며 고용 증가를 과도하게 억제해 왔습니다. 한 평가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들은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55% 늘었으나 고용은 겨우 1.8% 늘었다고 합니다.

지나친 임금격차도 청년 취업 증가를 가로막습니다.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0%에 미치지 못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0%를 넘을까 말까 합니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일자리의 수급 불일치를 키웁니다.

게다가 단기적으로는 인구구조의 문제가 청년층의 취업을 압박합니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그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취업연령에 접어들었습니다. 2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이 2016년에는 328만 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367만 명으로 39만 명이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상태를 방치한다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어나 청년실업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완료되기까지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몇 가지 배경을 정부는 무겁게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일자리 중심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 본예산에 일자리 사업이 많이 포함됐는데도 이번에 다시 추경을 제안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만이 아닙니다. 조선과 자동차 같은 특정 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들은 대량실업과 연쇄도산의 위기에 몰리는 등 경제위축이 심각합니다.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의 실업률은 2년 전의 2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조선소 가동 중단에 자동차공장 폐쇄까지 겹친 군산에서는 작년에만 인구의 1%인 2500여 명이 외부로 이주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인 특단의 대응과 중장기적인 구조적 대비가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들 지역의 경제회복

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청년 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 가운데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 9000억 원, 구조조정 지역 지원대책에 1조 원 등 모두 3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그리고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응급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추경’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잉여금 2조 6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했습니다. 금년의 초과세수를 활용하지도 않았고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추경안에 반영된 청년 일자리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 형성과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최근 K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 직장의 급여 수준과 고용형태가 그 사람의 10년 후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보다는 미취업 상태로 다른 기회를 기다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들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이 3년간 근무하면 정부가 2400만 원을 지원해 3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기존 청년 재직자도 5년간 근무하면 정부가 1080만 원을 지원해 3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기에 주거비 부담 경감과 교통비 지원 등을 더해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소득을 대기업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청년 고용을 늘리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9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

업종도 확대하겠습니다.

이공계 학사·석사 졸업생은 매년 14만 명 정도가 배출되지만 그 가운데 약 4만 명이 직업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졸업생 중 6000명을 선발해서 산학협력 R&D 사업에 참여한 뒤에 사전 협약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청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초기비용 부담을 줄여 드리겠습니다. 1500개의 기술혁신창업팀에 최대 1억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생활혁신창업 3000개 팀에는 최대 2000만 원씩의 성공불 용자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혁신모험펀드 등에 3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해 청년들의 초기 창업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돕겠습니다.

우수한 민관협력 창업기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정부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는 후속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지방과 해외를 포함해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고용 여건을 고려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들에 지급한 2017년도 초과세수의 지방교부세 정산분 약 3조 1000억 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요망합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해외 취업도 돕겠습니다. 해외 정착지원금 확대와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해외 일자리 취업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해외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진학보다 취업을 먼저 선택한 청년들이 진학이나 해외유학 등을 통해 고숙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 강화를 돕겠습니다.

성장 유망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만 4000명의 고졸 청년들에게 400만 원씩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에게 학기당 평균 320만 원을 지원하는 주경야독 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대학 1학년을 마친 후에 취업하고 2년간은 학업과 일을 병행해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도 5개 대학에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의 또 다른 목적인 지역 지원사

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 동구, 영암과 목포 등 8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과 충분히 협의해 실효성이 높은 지원책을 찾도록 노력했고 그 가운데 시급한 사업들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실직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구조조정 대신 휴직,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려 지급하겠습니다. 유급 휴업·휴직의 경우에는 지원 수준을 실지급수당의 66.7%에서 90%로 늘리고 지원 한도를 하루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2000만 원으로 2배 확대하겠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업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가운데 기술 보유자들에게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을 채용하는 연관 업종 기업에 1인당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실직한 비숙련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에도 최대 2년간의 훈련연장급여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의 경영 부담을 대폭 완화해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업종에 관련되는 지역기업과 협력업체들에 경영안정자금 1500억 원 등을 지원하고 시제품 개발과 판로 개척 등을 돕겠습니다.

조선업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도록 돕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용자 1000억 원과 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 원을 새로 공급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미래 신산업, 휴양·관광업 등 보완·대체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유치를 돕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기지역 내 신규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의 설비투자 지원율을 14%에서 34%로 높이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 동안 전액 감면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구조조정 위기지역과 업종에 대한 추가사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위기지역 지정 가능성 등 불확정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2500억 원의 목적예비비를 따로 확보했습니다.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비 2조 9000억 원은 올해 본예산의 청년 일자리 사업비 3조 원과 비슷한 액수이고, 구조조정 지역 지원대책비 1조 원도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추경사업과 함께 세제 지원, 금융 지원, 제도개선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투입하면 에코세대가 취업에 뛰어드는 2021년까지 18만 명 내지 22만 명의 추가 고용이 이루어지고 청년실업률도 1~2%p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지역 지원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꼭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돼야 지방자치단체들도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도 신속히 집행됩니다.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추경안이 의결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가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있습니다. 추경 사업과 함께 혁신성장, 규제혁신, 교육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 개정안과 미세먼지와 안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많은 민생법안도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건설근로자 등 약자의 위치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등 경제 분야 민생법안의 입법이 시급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지만 물 관리 일원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기능 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치 등 정부조직 개편이 아직 완결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일을 할 수 있도록 국

회에서도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과 함께 주요 민생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대통령 문재인 대독

○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1분)

○의장 정세균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 ○출석 의원(206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김경협
김규환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정우
김정훈	김종석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표	김해영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대출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영선	박용진	박인숙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현	송석준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윤관석
윤상현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군현	이동섭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수혁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희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진석	정춘숙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웅천	조정식	조훈현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최경환(평)	최고일
최운열	추미애	표창원	하태경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철호	황주홍		

#### ○개의 시 재석 의원(159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김경협	김도읍	김두관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원	김성태
金成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정우	김종석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표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명 재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청 원	서 형 수	설 훈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현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재 권	안 민 석	안 호 영	어 기 구
오 세 정	오 영 훈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 성 곤	유 기 준	유 동 수
유 성 엽	유 승 희	유 은 혜	윤 관 석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군 현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석 현	이 수 혁	이 인 영	이 재 정
이 정 미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명
이 종 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현 승	이 현 재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회 경
정 세 균	정 양 석	정 용 기	정 유 섭
정 재 호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최경환(평)	최 운 열
추 미 애	표 창 원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철 호	황 주 홍	

○산회 시 재석 의원(194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철 승	금 태 섭	김 경 협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옥
김 부 겸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원
김 성 찬	김 성 태	金成泰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춘	김 영 호	김 정 우
김 정 훈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미
남 인 순	노 응 래	노 회 찬	도 중 환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옥	민 병 두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영 선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정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설 훈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현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 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어 기 구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유 동 수	유 성 엽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수 혁	이 용 주
이 용 호	이 원 옥	이 인 영	이 재 정
이 정 미	이 정 현	이 종 결	이 종 명
이 종 배	이 주 영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현 승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회 경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양 석	정 용 기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진 석	정 춘 숙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옥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 운 열	추 미 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철 호	황 주 홍		

○청가 의원(28인)

고 용 진	기 동 민	김 관 영	김 광 수
김 정 재	김 현 권	김 현 아	민 홍 철
박 완 수	박 재 호	송 영 길	오 제 세
이 만 회	이 용 득	이 은 권	이 찬 열
이 철 규	이 철 희	정 갑 윤	정 동 영
정 우 택	정 운 천	정 태 옥	천 정 배
최 도 자	최 연 혜	홍 일 표	황 회

○국회 참석자

사 무 총 장	김 성 곤
의 사 국 장	권 영 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이 낙 연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 상 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외교부장관	강	경	화
행정안전부장관	김	부	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	중	환
환경부장관	김	은	경
고용노동부장관	김	영	주
국토교통부장관	김	현	미
해양수산부장관	김	영	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	중	학

## ○출석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	용	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장관직무대리)	김	현	수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	인	호
금융위원장	최	중	구

## 【보고사항】

## ○의원 사직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연월일
김경수	경상남도 김해시을	더불어민주당	2018. 5. 14.
박남춘	인천광역시 남동구갑		
양승조	충청남도 천안시병		
이철우	경상북도 김천시	자유한국당	

##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사직 (공직선거법후보)	2018. 5. 14.
박남춘			
양승조			
이철우	자유한국당		

## ○의안 제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8. 5. 14. 장정숙 · 전해숙 · 이동섭 · 김경진 · 손금주 · 윤관석 · 김광수 · 천정배 · 박주현 · 이용호 의원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8. 5. 14. 제윤경 · 노웅래 · 강훈식 · 정춘숙 · 문희상 · 유승희 · 송옥주 · 김병기 · 김영호 · 김종민 · 심재권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8. 5. 14. 심재권 · 이개호 · 김두관 · 송기현 ·

문희상 · 유승희 · 김종민 · 이수혁 · 김상희 · 설훈 · 홍영표 · 송옥주 · 이훈 · 소병훈 · 김철민 · 전해철 · 서영교 · 김영호 · 노웅래 · 김병기 · 신창현 · 최운열 · 이찬열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5. 14. 송옥주 · 안규백 · 정춘숙 · 박정 · 노웅래 · 김경협 · 이찬열 · 신창현 · 김영호 · 김중로 · 김경진 · 원혜영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8. 5. 14. 이석현 · 유은혜 · 김해영 · 신경민 · 손혜원 · 김철민 · 신창현 · 안호영 · 김민기 · 박홍근 · 이춘석 · 임종성 의원 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8. 5. 14. 송기현 · 유동수 · 안호영 · 박재호 · 원혜영 · 남인순 · 윤후덕 · 황희 · 심기준 · 박주민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2018. 5. 14. 손혜원 · 이춘석 · 강훈식 · 안규백 · 윤후덕 · 이동섭 · 유동수 · 권미혁 · 진선미 · 박주민 · 한정애 · 서영교 · 김영호 · 김경협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018. 5. 14. 홍철호 · 윤영일 · 정진석 · 이명수 · 황영철 · 안상수 · 박덕흠 · 박성중 · 정갑윤 · 김명연 의원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2018. 5. 14. 금태섭 · 이학영 · 이춘석 · 고용진 · 이철희 · 남인순 · 윤호중 · 한정애 · 전해숙 · 안호영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8. 5. 14. 윤후덕 · 정춘숙 · 송기현 · 권미혁 · 이찬열 · 박정 · 이수혁 · 박선숙 · 안호영 · 황주홍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8. 5. 14. 윤후덕 · 정춘숙 · 송기현 · 권미혁 · 이찬열 · 박정 · 이수혁 · 박선숙 · 안호영 · 황주홍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8. 5. 14. 박재호 · 전재수 · 최인호 · 정인화 · 권철승 · 박정 · 위성곤 · 황희 · 심기준 ·

김두관 · 김해영 의원 발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18. 5. 14. 심상정 · 윤소하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중회 · 김종대 · 박용진 · 조배숙 · 천정배 의원 발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2018. 5. 14. 이은권 · 김성원 · 홍문표 · 장석춘 · 윤상현 · 함진규 · 박대출 · 성일종 · 金成泰 · 이완영 · 정용기 의원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18. 5. 14. 이학재 · 정병국 · 조배숙 · 유승민 · 박덕흠 · 윤종필 · 김세연 · 지상욱 · 하태경 · 이동섭 · 유동수 · 김삼화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8. 5. 14. 김삼화 · 이동섭 · 김중로 · 이언주 · 이찬열 · 신용현 · 김광수 · 채이배 · 권은희 · 오세정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8. 5. 14. 윤후덕 · 정춘숙 · 송기현 · 권미혁 · 이찬열 · 박정 · 이수혁 · 김영호 · 박선숙 · 안호영 · 윤관석 의원 발의)

이상 17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휴회의 건**

(2018. 5. 15. 의장 제의)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2일간)

**○통지**

**국회의원 궐원 통지**

2018. 5. 14. 국회법 제137조 및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경수 · 박남춘 · 양승조 · 이철우 의원이 궐원되었음을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지함